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 요약보고서 -

202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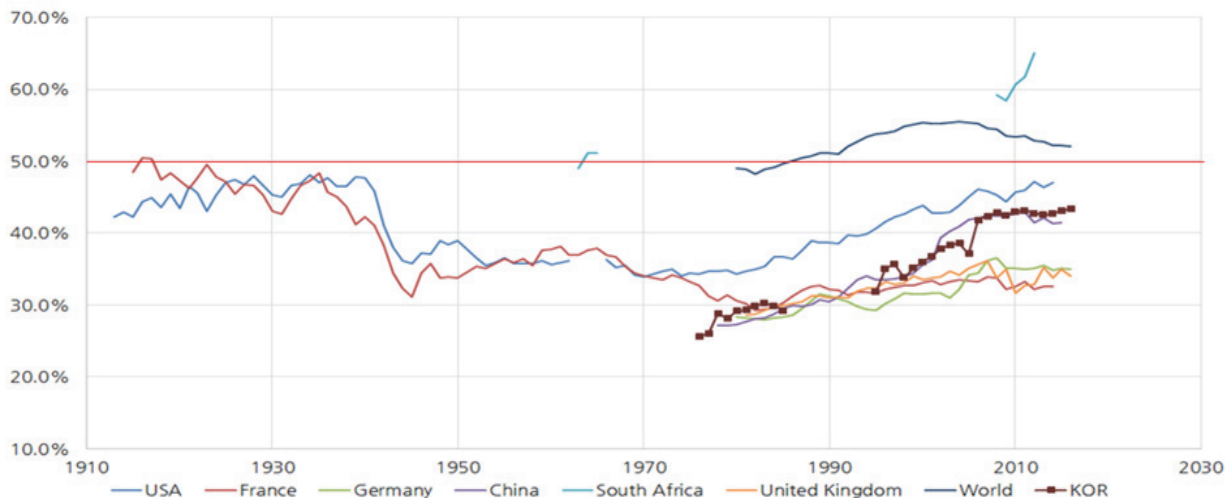
1. 경제 · 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현상

① 양극화 현상, 전 세계적 확대 추세

○ (전 세계적으로 경제 · 사회적 격차 확대) 탈 농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간 · 기업간 불균형성장과 양극화 경험

- 그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대외교류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양극화가 확대** (글로벌 GDP ; 4.5%('00~'0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08~'18)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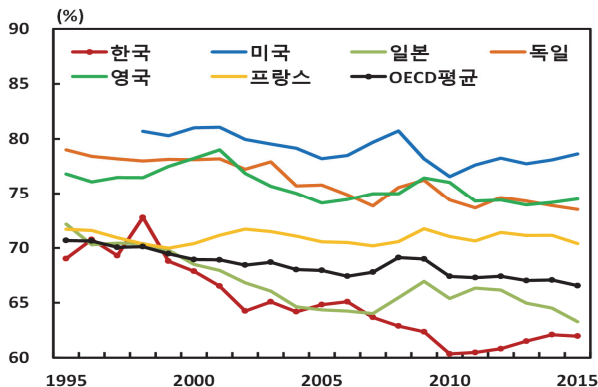
자료 : WID(World Inequality Database, 2019)와 Top Incomes in Korea : Update, 1933-2016(Kim, 2018)을 통해 재구성

②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확대를 넘어 고착화

○ (우리나라의 양극화, 양권화;兩圈化) 우리나라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경직으로 격차상태가 고착화되는 이른바 **“격차의 구조화 문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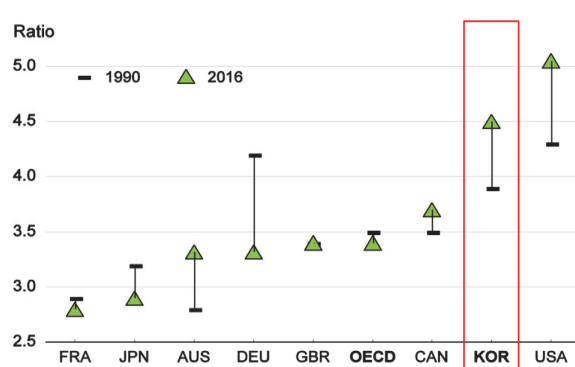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증가의 원인은 노동과 자본간 소득의 불균형에서 출발 (노동소득분배율 79.3%(1996년) → 70.6%(2014년)), 한국노동연구원(2015년)

[주요국 가계소득/GNI 비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2017) 재인용(OECD).

[1분위대비 10분위 비율]



자료 :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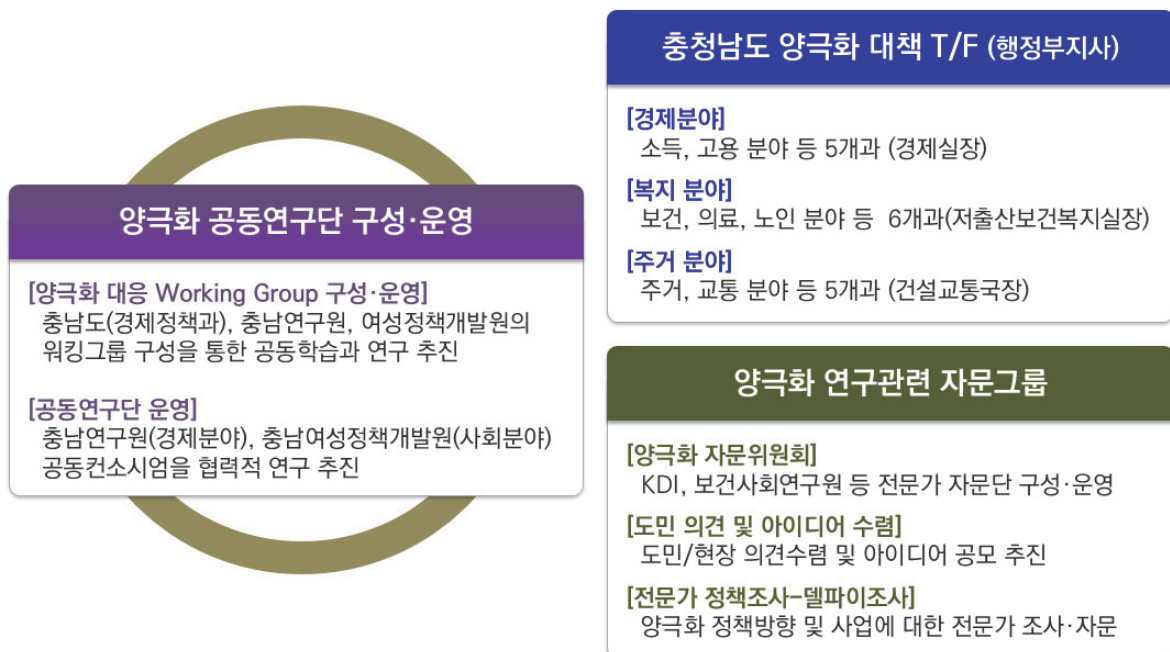
③ 그 동안의 양극화 논의와 연구

-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북유럽 등의 사례와 양극화 대책연구에 있어 **지속적 성장, 적극적 조세재정정책과 사회정책**으로 귀결
 - 주요 북유럽은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과 복지기반의 사회정책** 확대를 중점 추진
 -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양극화를 완화, **고용촉진적 새로운 산업육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탈출과 소득 개선 추진 필요



④ 양극화 정책수립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양극화 대응 **공동연구단, 양극화 대책T/F, 자문그룹** 구성을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
 - * 양극화 완화를 위한 도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추진 (10.28~11.8)
 - * 양극화 인식과 정책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11.18~11.29, 2주간), 550명 대상 추진



2. 양극화 요인에 대한 충남의 여건

① 충남의 경제성장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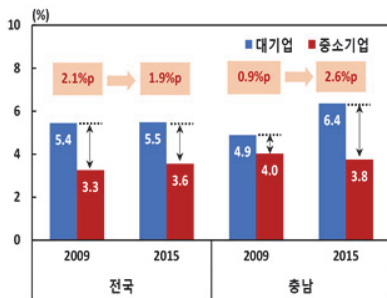
○ (충남, 한국경제의 축소판) 국가기간산업의 집적, 수출제조 대기업 중심 경제

-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CAGR) 6.3%(전국 3.8%)로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 시현(GRDP 115조원, 2017)
- 수출 제조업기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생산·투자전략에 지역경제 변동성이 크고 외부 경제충격에 민감

○ (생산과 소득의 괴리) 생산은 전국 최고수준이나,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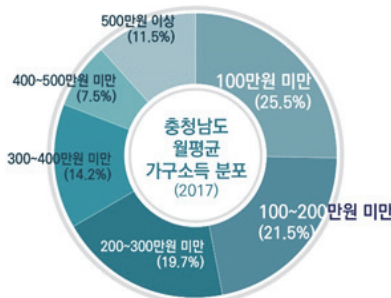
- 1인당 GRDP 5,149만원(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 1,761만원(전국 6위), 1인당 민간소비 1,405만원(전국 16위)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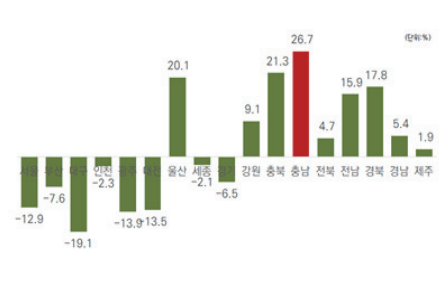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017) 재인용

[충남 월 평균 가구소득 분포]



자료 :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2017)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

② 양극화 요인검토

○ (양극화의 요인 검토) 양극화는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

- 경제성장과정 즉, 탈농업화·탈공업화로 대변되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산업·업종·기업간 '불균형성장'과 이에 따른 양극화를 경험 (선진국의 경험, KDI(2005년))
 - * (분배 개선) 고생산성 부문이 고용이 늘면서 팽창 → 해당/연관부문의 고임금 직종의 고용증가
 - * (분배 악화) 고생산성 부문이 고용 증대없이 팽창 할 경우 → 저임금부문의 고용이 증가

○ (양극화의 3대 요인) 경제환경변화 가속화+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정책적 대응 미흡

- 양극화의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구조고도화 과정에서 파생
- 양극화 요인과 충남의 경제산업여건의 검토는 양극화에 대한 충남의 경제구조적 변화방향을 모색

③ 불균형 성장과 편중된 지역경제구조

① 경제환경 급변 (글로벌화, 중국의 급부상, IT등 기술진보, 상품자본시장 개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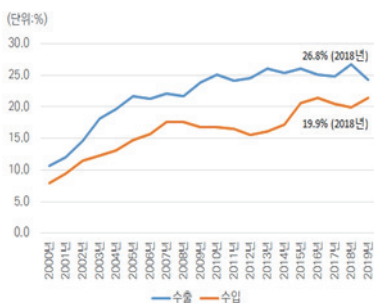
○ (제조업·수출중심 성장의 한계) 수출·제조업·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대외 경제충격에 취약

- 충남의 중화권 수출비중은 52% 이상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중국의 실질 GDP 1% 하락시 → 충남지역의 총수출(실질) 0.8%p, GDP(실질, 전산업) 0.4%p 하락 (한국은행, 2015)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 기술혁신 등의 4차 산업대응 산업적 기반과 지원서비스가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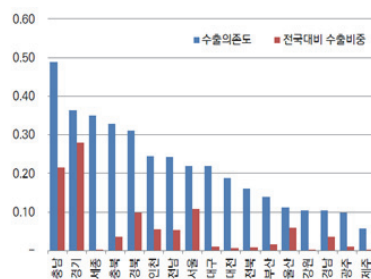
- 전문·단순기능 인력간 수요격차 확대와 선도기업 및 고성장기업과의 격차 확대 가속화
- 충남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분야(정보서비스업종)의 전체 종사자가 0.5%에 불과 (전국 1.2%)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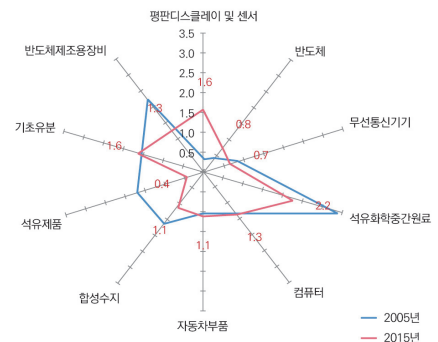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자료

[충남의 수출의존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지수(CAC)]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자료

② 지역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반 취약, 자영업주 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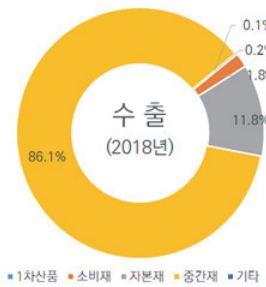
○ (대기업과 가공무역중심 구조) 중간재와 기초소재 수입을 통해 가공된 중간재 수출

- 대기업 중심 구조로 전체 고용의 14.2%, 매출의 41.8%(5인 미만 소기업은 13만개(82.0%), 고용의 26.7% 점유)
- 중간재 수출이 점차 확대 58.9%(2010년) → 86.1%(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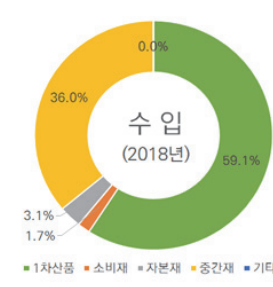
○ (분공장 중심, 역외유출 가속화) 대기업중심의 생산중심지역으로 소득, 소비의 연계성 미흡

-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역외유출 비중이 전 시도중 1위(2016년 기준)로 지역내 생산과 소비 연계 미흡으로 지역경제 악순환 고리 고착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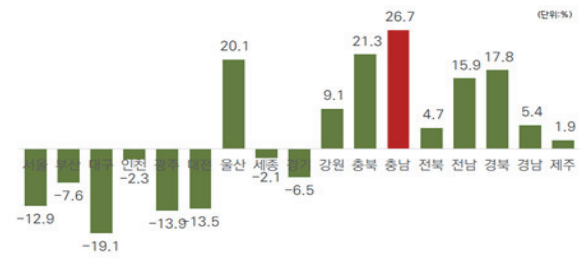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지수(CAC)]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자료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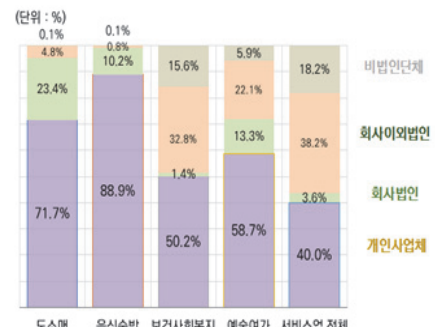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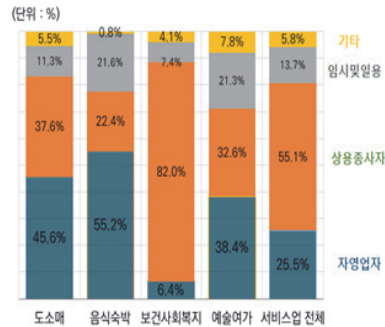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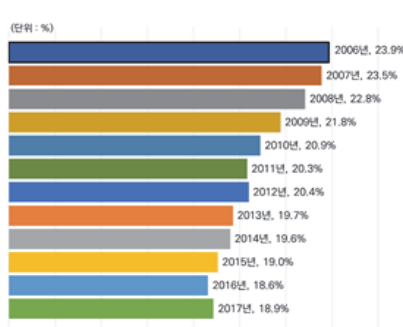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과다상태 지속) 자영업자 과다로 불안정성 확대, 자영업자의 고령화 진행

- 충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18.9%로 점차 낮아지는 수준이지만,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90년대 이후 25~28%수준 유지(미국 6.5%, 일본 11.1%, OECD 평균 14.1%)

○ (자영업 성장의 한계) 전근대적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에 한계, 조직화 미흡으로 영세화

- 단독 경영 및 가족구성원에 의존한 영세업체 (무급가족종사자 169,33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8.9%, 농림어업 제외)
- 개인사업체 위주로 조직형태의 낙후, 영세화로 인한 경영안정성 미흡

[충남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추이] [주요 서비스업 종사자 지위별 구성] [주요 서비스업의 조직형태별 구성]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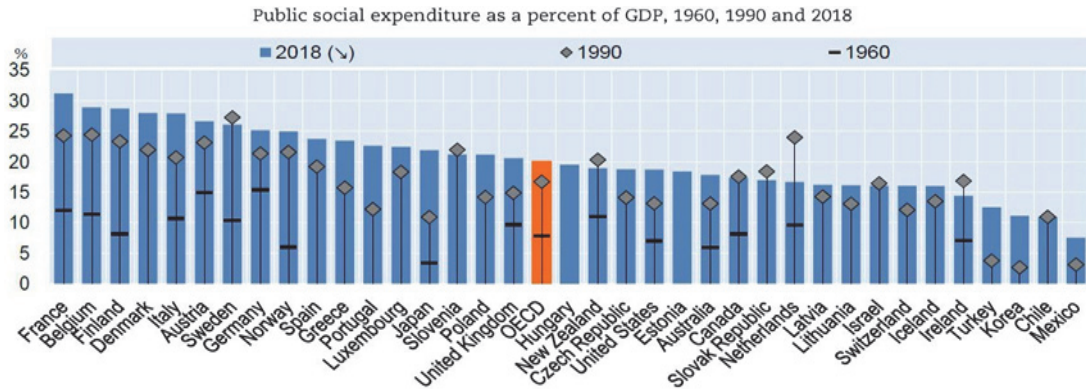
③ 정책적 대응미흡 (경제구조개혁지체, 단기적 요법, 인력투자 및 사회안전망 대책 미흡)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한계기업의 확대 지속, 새로운 성장산업과 기업발굴의 미흡

-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구조조정 진행,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으로 과도한 비정규직 양성
- 중장기 계획인 아닌 단기적 처방으로 과도한 창업지원과 무리한 내수부양(가계대출 확대, 부동산규제 완화 등)

- (인력투자 및 사회안전망 대책 미흡) 고용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단순지원과 사후관리 미비
- (정부의 역할과 기능 미비)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정책추진 수단의 한계
 -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지출 규모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규모 (1960, 1990, 2018)]



자료 : OECD(2019)

4 양극화 전망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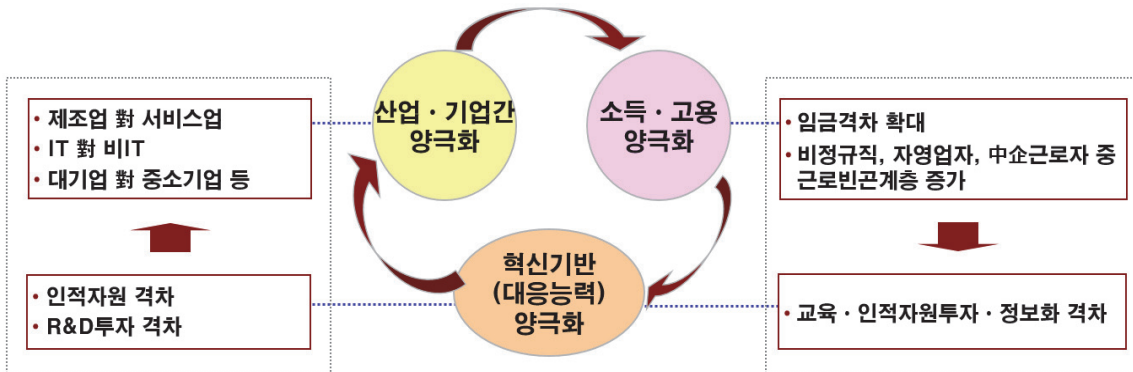
- (대내외적 여건은 격차 확대를 가속화) 글로벌화 가속,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적 압박 요인 확대
 - 제조업, 대기업, 수출중심으로 성장한 충남의 특성상 경제성장둔화는 경제주체 전분야에 영향
 - 충남지역 특성에 맞는 시의성 있는 경제정책 수단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요구
- (경제주체의 격차는 지속 전망) 기존 정책의 한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접근 방법 필요
 -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경제주체간 혁신기반의 격차문제로 임시·단기 정책으로는 접근에 한계
 - * 경제주체간 혁신기반 격차는 교육·기술 등 기존 시장·제도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제도 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는 자동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 (산업분야 전망) 선도업체와 함께 취약업체의 비중 확대, 대상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변화, 글로벌 블록화 및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선도기업, 글로벌 초국적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 중심으로 성장하고, 기타 취약업종과 한계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전망
- (고용측면 전망) 산업과 고용구조의 변화, 재교육과 성장 업종중심의 고용정책 유도 필요
 - 공공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으로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 청년층,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확대를 통해 중기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 필요

3. 충청남도의 소득 양극화 실태 분석

① 양극화 분석 틀

○ (경제 구조적 측면의 분석과 검토) 지역 경제순환과정에 대한 실체적 접근

- 경제의 성장으로 소득과 분배가 산업·기업·업종간 격차 → 소득·고용 격차 → 혁신기반(교육, 인적자원 투자기회 등) 격차 → 산업·기업간 격차로 확대 재생산



자료 :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정부 T/F합동 ·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자료의 구성) 지역 경제주체에 대한 신뢰성 있고, 분야별 정량적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의 활용

- 양극화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성별/근로형태별/업종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득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 (자산 등의 검토는 정책접근성과 연구 한계)

- * 가계(소득) 부문: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008~2018년), 충남표본 27,197명 (전국 387,379명)
- * 기업 부문: 신용평가 정보(kisvalue, 2000년~2018년), 충남기업 1,096개, 역외공장 99개 (전국 31,255개)
- * 정책 부문: 2019년 실국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예산/전달체계 등 검토

○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검토) 취약부문·계층(양극화된)의 '사회적 이동성'을 가진 resilience(복원력)마련이 필요하나 정책과 접근 수단의 한계에 대한 인식

- 소득재분배 등은 지역차원의 접근에 한계성, 경제정책적 수단의 접근 방법

○ (명확한 현실진단과 당위성 논리 개발이 선행) 정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양극화는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가지는 절대적 측면이 있지만, 특성에 따라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대적 측면(가치측면)의 성격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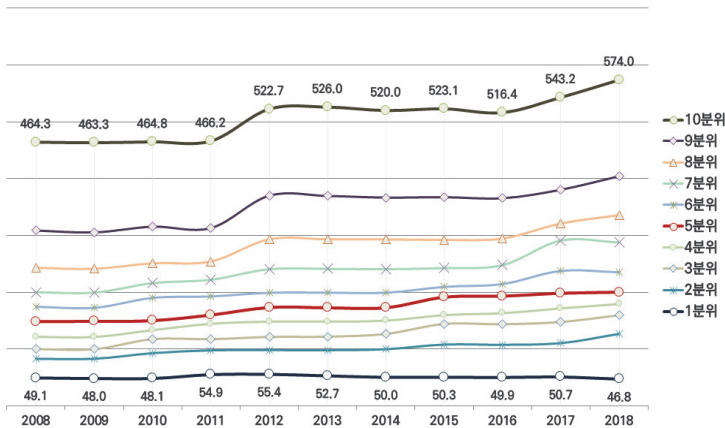
② 충남 소득분위별 비중과 변화 추이

○ (분위별 평균임금 격차 확대)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소득이 상승했지만, **소득 최하위 계층인 1분위는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수준**

- 소득 1분위 계층 (하위 10%)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악화)-비정규직, 시간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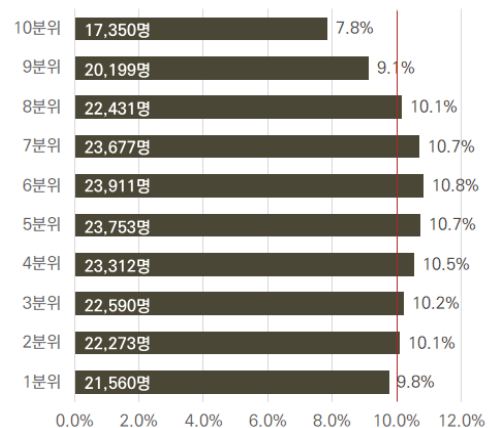
* 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 추세는 양호한 수준이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전국과 비슷한 양상

[충남의 분위별 소득(월평균 임금)격차 변화 추이(만원)]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08~2018

[종합소득금액 분위별 전국 비중]



자료 : 국세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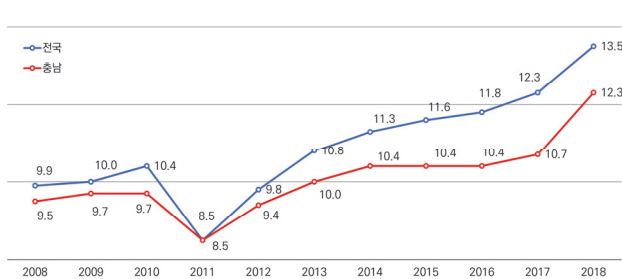
○ (저소득층 소득 격차 확대와 중산층 비중 감소)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의 비중은 감소**

- 양극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분위와 10분위 소득배율은 2008년 9.5배에서 2018년 12.3배로 더욱 격차가 확대(전국 9.9배 → 13.5배)

* 중산층 비율(중위소득의 50%~150%)은 61.5%('08) → 57.4%('18)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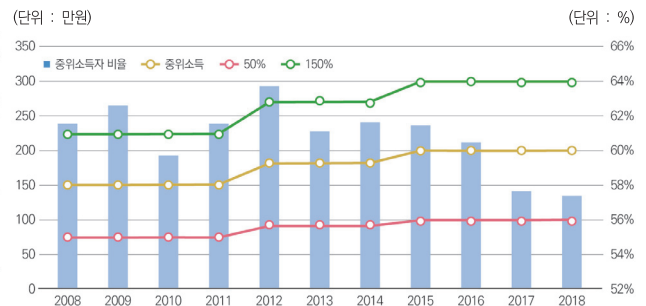
* 중산층의 감소는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이 하위소득계층 또는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의미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 10%와 하위 10%)]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08~2018

[중산층비율(중위소득의 50%~1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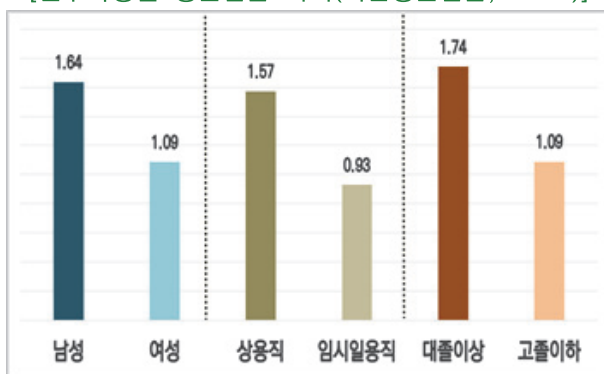
③ 인구특성에 따른 소득 양극화 분석

○ (인구특성별 임금격차) 성별, 근로형태별,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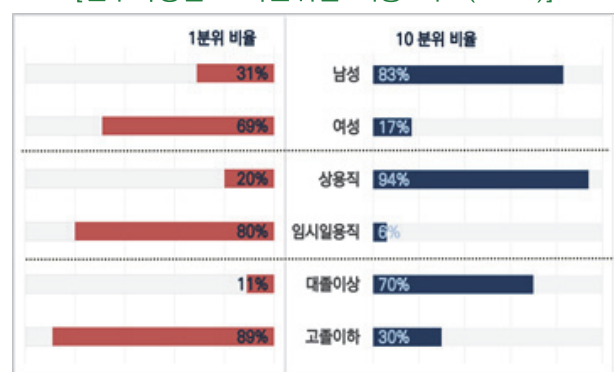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존재(시간평균 임금기준, 상용직 1.57만원 / 임시일용직 0.93만원)
- 소득분위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임금격차는 더 심각하게 존재(저소득구간인 1분위에서는 여성, 임시일용직, 고졸이하 근로자가 대부분)

* 고소득구간인 10분위에서는 남성, 상용직, 대졸이상 그룹의 근로자가 평균 82%이상, 저소득층구간인 1분위에서는 여성, 임시·일용직, 고졸이하 그룹의 근로자가 평균 79%이상

[인구특성별 평균임금 차이(시간평균임금, 2018)]



[인구특성별 소득분위별 비중 비교(2018)]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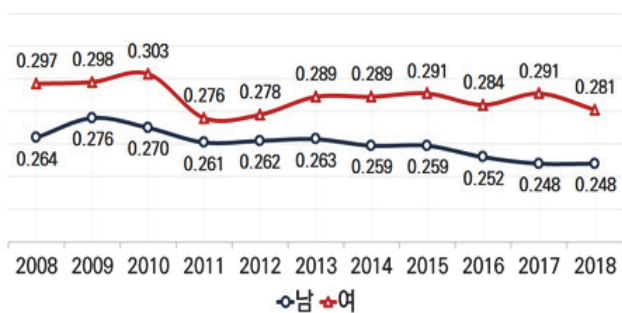
○ (성별 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아직까지 크게 존재하며, **성별 내부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

- 남성 대비 여성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08년 0.61에서 2018년 0.66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임금불평등도의 경우 두 성별에서 모두 완화되고 있으나,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저소득구간인 1분위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중이 69%이며, 고소득구간인 10분위에서는 남성 근로자 비중이 83%에 달함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남성임금=1)]



[성별 임금 불평등도(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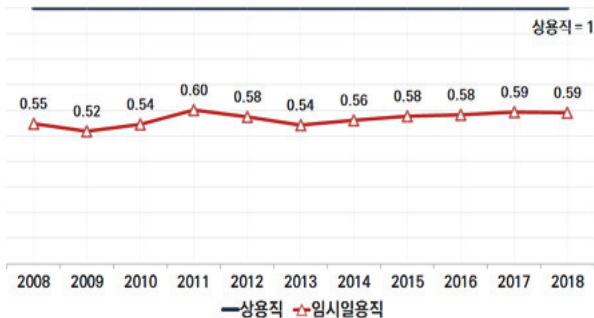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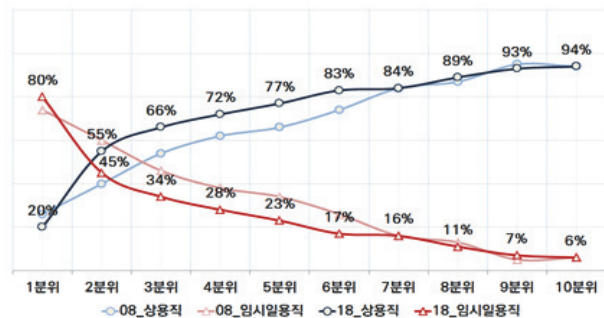
○ (근로형태별 격차)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격차 지속

- 상용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0.59로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 월 임금 상용근로자 295.8만원, 임시근로자 148.3만원, 일용근로자 142.7만원
- 소득분위별로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구간인 1분위에서는 임시·일용직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구간인 10분위에서는 상용직이 94%를 차지함에 따라,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비율(상용직임금=1)]



[분위별 근로형태별 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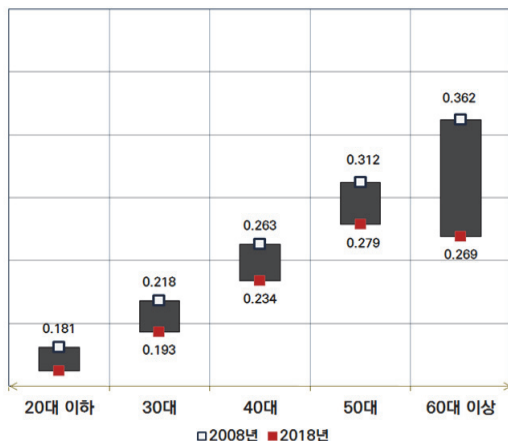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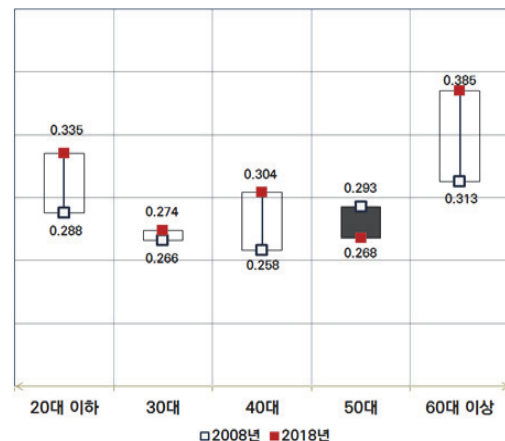
○ (연령별·근로형태별 격차) 50대, 60대 이상에서 높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은 격차가 확대되어 나타남 (상용직→소득불평등 완화, 임시·일용직→소득 불평등 악화)

- 상용직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불평등도는 더 악화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
-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근로형태 구분에서, 연령에 따른 임시·일용직의 임금불평등도를 살펴보면 50대에서만 임금불평등도가 개선되었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상용직) 격차(지니계수)]



[연령별(임시·일용직) 격차(지니계수)]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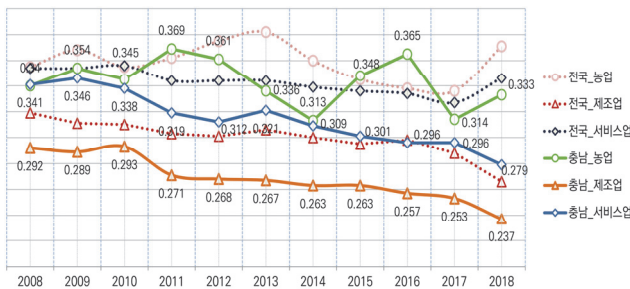
4 업종·기업 및 지역에 따른 소득 양극화 분석

○ (업종별·기업별 격차) 제조업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대·중소기업간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

- 충남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대기업 대비 2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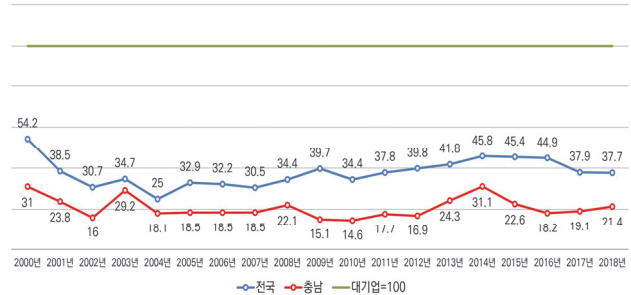
- * (농업) 임금격차의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과 전국 모두 높은 격차를 가짐
- * (제조업) 임금격차는 충남과 전국 모두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 (서비스업) 임금격차는 충남은 완화되는 반면, 전국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전국과 충남의 임금격차(지니계수) 변화 추이]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8

[충남 중소기업(1인당) 영업이익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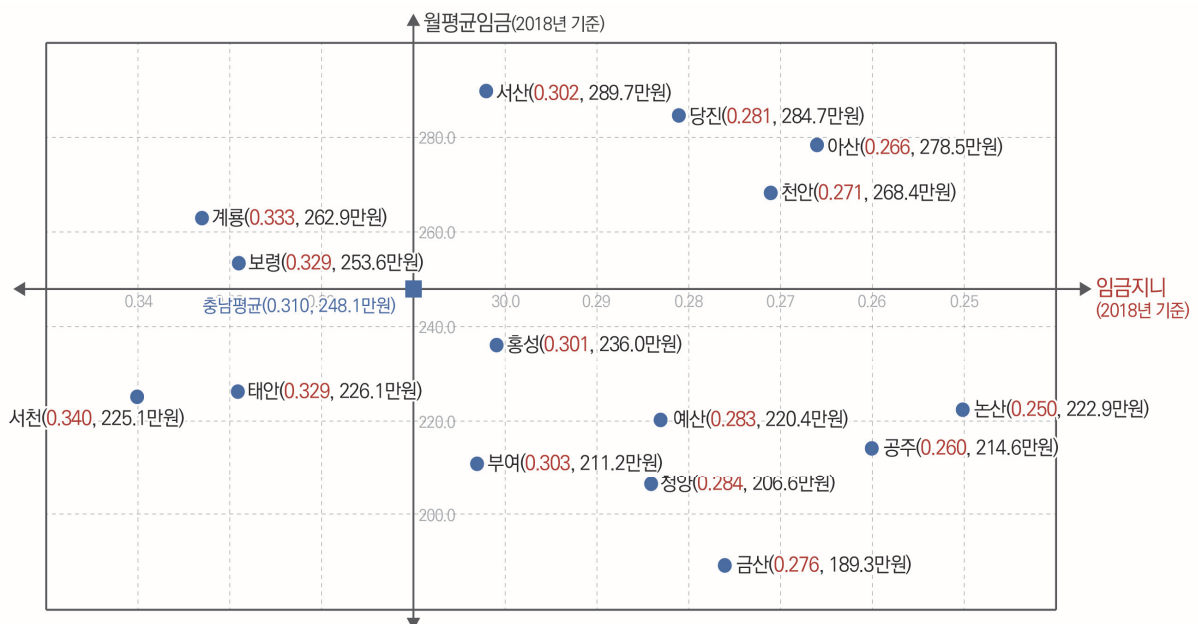
자료 : kisvalue, 2000~2018

○ (지역별 격차) 산업이 발달된 북부권이 임금수준과 격차도 오히려 낮은 수준

- 지역내 격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군에 대한 지표적 검정과 정책영역의 도출

- * 충청남도 균형발전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소득(1인당 월평균임금)과 시군별 임금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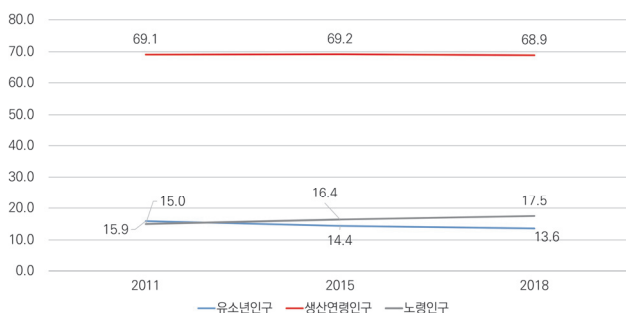
4. 사회양극화 주요 실태와 정책방향

① 인구 및 가구·가족 구조의 변화

○ (인구구조 변화) 출생아 수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령 인구가 증가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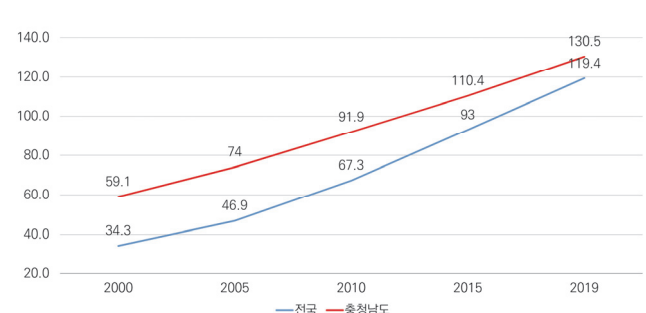
- 유소년인구(15세 미만) 비율은 2011년 15.9%, 2018년 13.6%로 감소
-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011년 15.0%, 2018년 17.5%로 증가
- 노령화지수*는 2000년 59.1명에서 2019년 130.5명으로 증가 *14세 이하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유소년, 생산연령 및 노령 인구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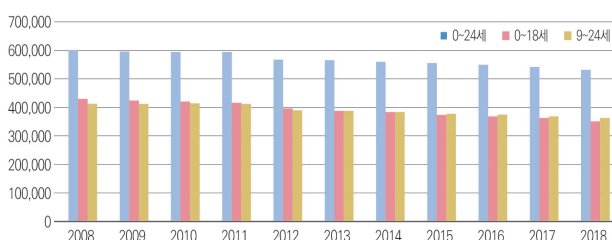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차세대 삶의 질) 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아동 삶의 질 지수가 대부분 영역에서 하위 수준

- 0~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008년 42.7만 명에서 2018년에는 35.2만 명으로 감소
- 9~24세 청소년 인구는 2008년 41.1만 명에서 2018년 36.0만 명으로 감소
- 청소년 학업중단율은 2000년 1.1%에서 2017년 0.7%로 다소 감소
- 충남 아동 삶의 질 지수*는 2012년 전국 13위, 2013년 16위, 2015년 13위, 2017년 1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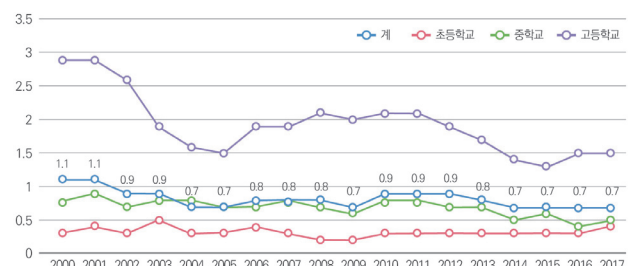
* 2018년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집(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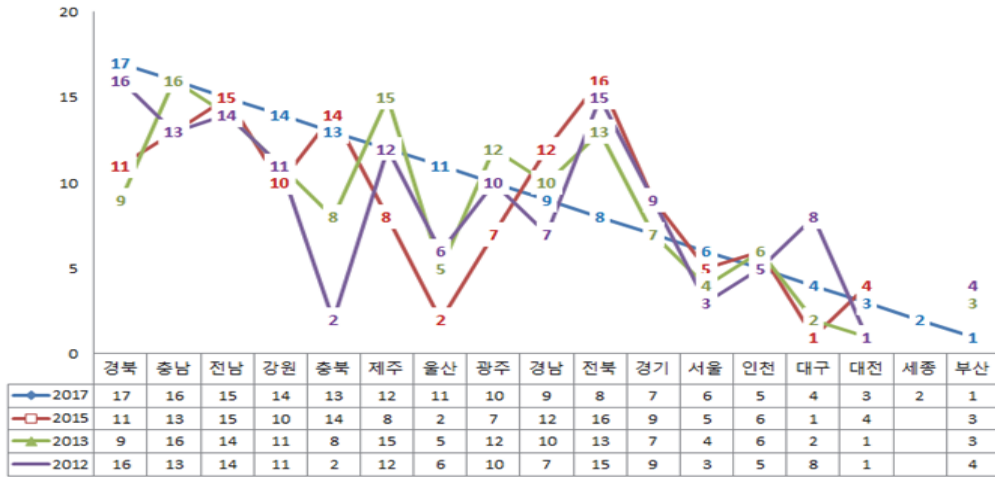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충청남도 교급별 학업중단율]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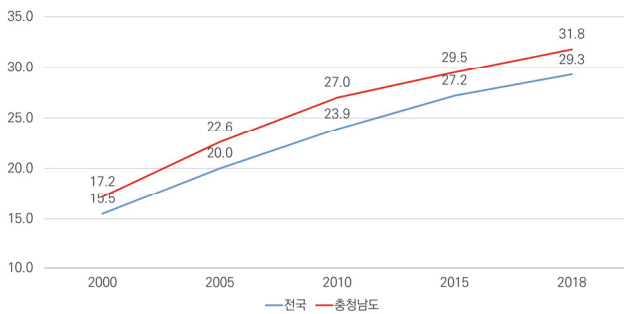
[지역별 아동 삶의 질 순위 추이]



자료 : 2018년 한국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집(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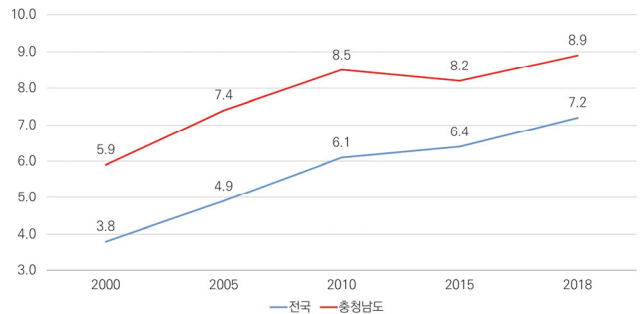
- (가구·가족 다양성 증가) 1인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 가구원 모두 노인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외국인주민 가구 등 가구 유형과 가족 다양성 증가
- 2005년 1인 가구비율 22.6%에서 2018년 31.8%(전국 6위)로 증가
 - 2005년 독거노인 가구비율 7.4%에서 2018년 8.9%(전국 6위)로 증가
 - 2018년 가구원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는 135,377가구
 - 2005년 등록장애인 수 92,634명에서 2018년 131,190명(전국 8위)으로 증가
 - 외국인주민은 2006년 20,641명에서 2018년 117,094명(비율상 전국 1위)으로 증가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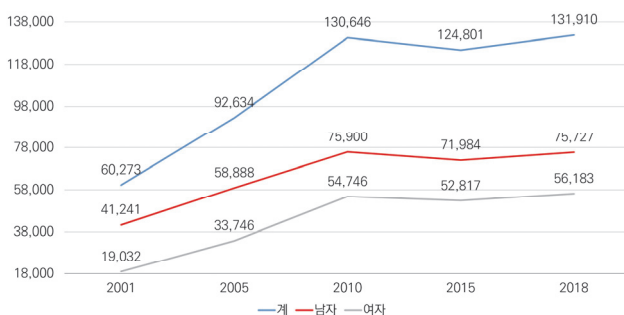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독거노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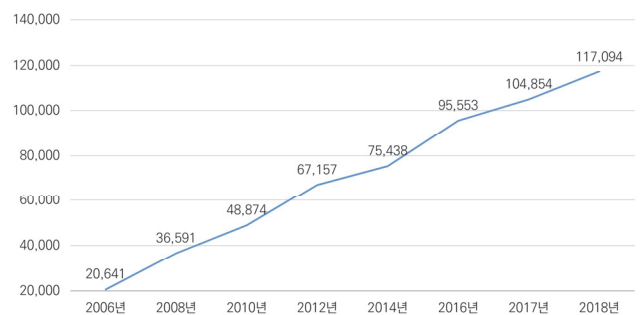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충남 등록장애인 수]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충남 외국인주민 수]



자료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② 전국 대비 충남 도민의 삶의 질 수준

* 관련 통계 :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통합 주요 지표, 도정 주요관리 지표 등

- **(교육)**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수준이 하위권에 속하며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만족도(학교 환경, 교유관계, 교육내용 등)가 낮은 수준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8.7만원 (2018년, 17위)
 - 학교생활만족도(학교 시설 및 설비)는 46.78% (2018년, 10위)
 - 학교생활만족도(학교 주변 환경)는 47.3% (2018년, 10위)
 - 학교생활만족도(교우관계)는 74.6% (2018년, 12위)
 -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는 51.8%(2018년, 12위)
- **(여가와 문화)** 여가시간 충분도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가활용만족도 등 여가 문화 분야 수준이 낮은 편
 -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 35.6%, 주말 47.9% (2018년, 16위)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은 61.4% (2019년, 14위)
 - 여가활용만족도는 28.2% (2019년, 12위)
- **(계층인식)** 주관적 귀속계층(사회경제적 지위)과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은 수준
 - 2018년 주관적 귀속계층(사회경제적 지위)은 3.71점(0~10점)으로 낮은 편
 - 본인 계층이동가능성 2017년 22.5%에서 2019년 22.0%로 감소
 - 다음세대 계층이동가능성 2017년 31.8%에서 2019년 27.3%로 감소
- **(자살)**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게 나타남
 -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35.5명 (2018년, 1위)
 - 65세 이상 자살률은 62.6명으로 전국 48.6명보다 높은 수준 (2018년)
- **(건강)** 도민의 건강수명을 위협하는 건강 지표가 낮은 수준
 - 비만율 32.1%(2018년, 6위), 고혈압 19.5%(2018년, 5위), 규칙적 운동 35.2%(2018년, 15위)
- **(봉사 및 기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전국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참여율 자체의 상승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기부도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17년 17.7%(11위)에서 2019년 19.5%(3위)로 상승
 - 기부 참여('있음'으로 응답한 비율)는 23.7% (2019년, 전국 13위)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는 최근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삶의 만족도는 2017년 28.7%(11위)에서 2019년 39.1%(9위)로 상승

③ 충남 사회지표조사 주요 결과

- **(공동체 효율성)** 10~30대 공동체 효율성 지수가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보임
 - 15~19세 4.04점, 20대 4.02점, 30대 4.56점, 40대 5.08점, 50대 5.74점, 60세 이상 6.69점
- **(지역사회 소속감)** 10~20대의 지역사회 소속감 느낌 비율은 50% 이하 수준이며,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유로 10대는 '교육환경 낙후', '문화체육시설 낙후'로 응답
 - 지역사회 소속감 있음 응답 비율(점수) : 15~19세 48.8%(4.77점), 20대 45.7%(4.57점), 30대 54.7%(5.10점), 40대 64.1%(5.57점), 50대 72.3%(6.12점), 60세 이상 85.4%(7.03점)
 - 15~19세 지역사회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유 : 교육환경 낙후 23.4%, 문화체육시설 낙후 20.4%
- **(노동)** 60세 이상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낮음
 - 연령별 임금수준 만족도 : 15~19세 13.3%, 20대 27.5%, 60세 이상 28.4% 순
 - 연령별 고용안정성 만족도 : 15~19세 22.1%, 60세 이상 26.2%, 20대 33.9% 순
 - 소득수준별 임금수준 만족도 : 100만원 미만 24.6%, 500만원 이상 40.3%
 - 소득수준별 고용안정성 만족도 : 100만원 미만 16.8%, 500만원 이상 48.5%

④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사회안전망 강화)** 낮은 복지재정 수준 상향, 중장년·노년 세대의 빈곤 완화와 자살률 감소 정책 확충,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공동체 포용성 강화)** 1인, 노인, 한부모, 조손, 북한이탈, 다문화 등 가족 다양성 증가 대응, 고립·소외·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공동체 자원 활성화
- **(청(소)년 층 계층이동가능성, 신뢰와 소속감 강화)** 사회 이동성 지원기반 강화,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 정책 활성화, 미래 희망 부여로 인구감소 및 사회갈등 대응
- **(아동·청(소)년 교육 및 문화 격차 축소)** 마을교육 및 미래사회 직업관련 교육 활성화, 장애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문화예술 및 교육 기회 확대
- **(중장년, 노년, 저소득층 문화여가 기회 확대)** 중장년, 노년, 저소득층의 문화 여가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자 풀 확대
- **(건강생활 활성화 및 건강관리 강화)** 규칙적 운동 실천 강화 등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개선,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
- **(일자리 확대 및 소득격차 완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대책 강화

5. 양극화에 대한 도민 수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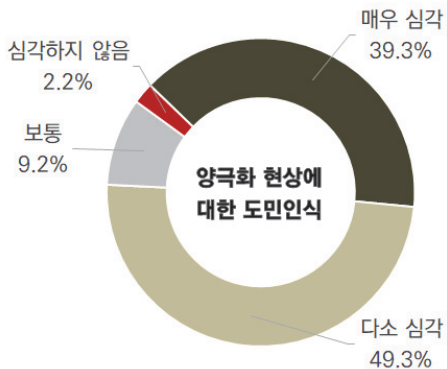
1 양극화 인식과 원인

* 설문조사는 충남연구원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공동으로 충남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8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인터넷 및 직접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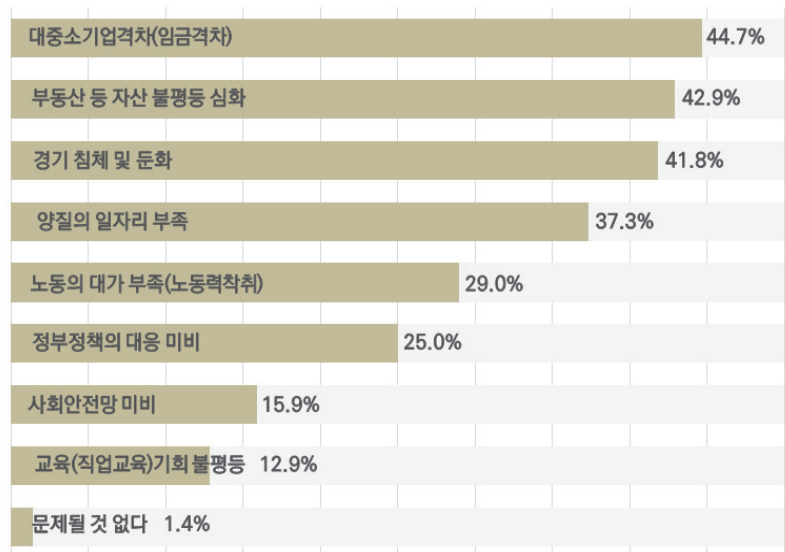
- (양극화 인식과 원인) 양극화의 원인은 **소득과 자산 등의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8.6%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

*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10점 만점에 3.61점으로 양극화에 대해 부정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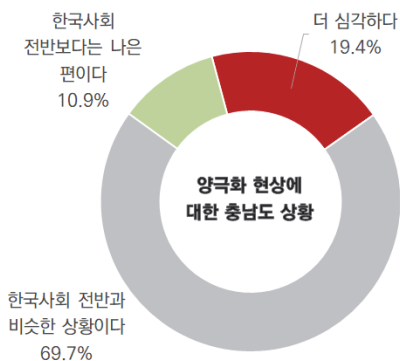


[양극화 원인에 대한 도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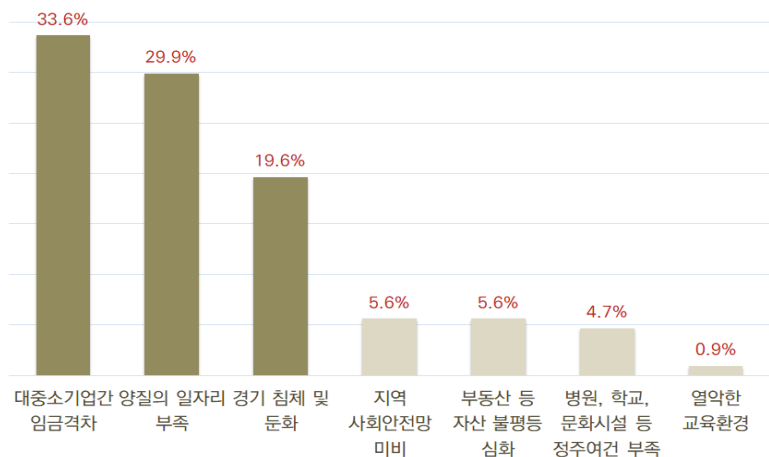


- (충남지역의 양극화) 우리지역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소득, 일자리, 경제 성장 등의 경제구조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양극화에 대한 충남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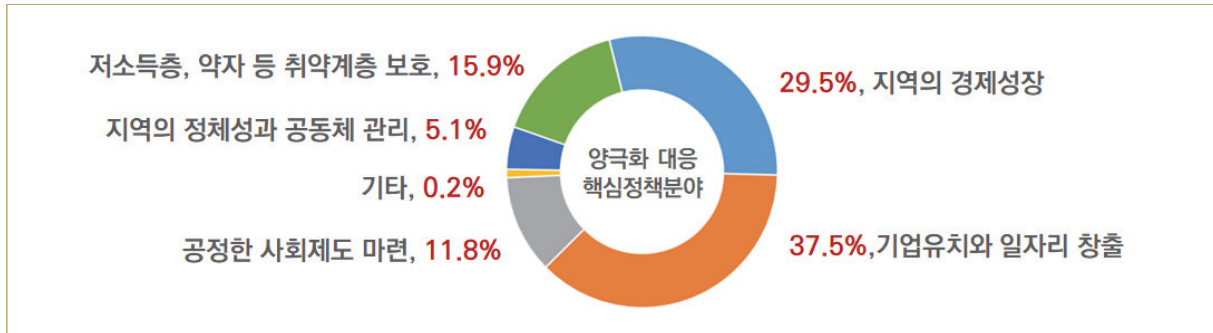
[충남지역이 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② 양극화 정책방향 조사

- (양극화 대응 핵심 정책분야) 충남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 연령별로는 20대(33.3%)와 30대(42.2%)가 지역경제의 전반적 성장을 중요시했고, 40대(46.4%)와 50대(41.0%)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정책이라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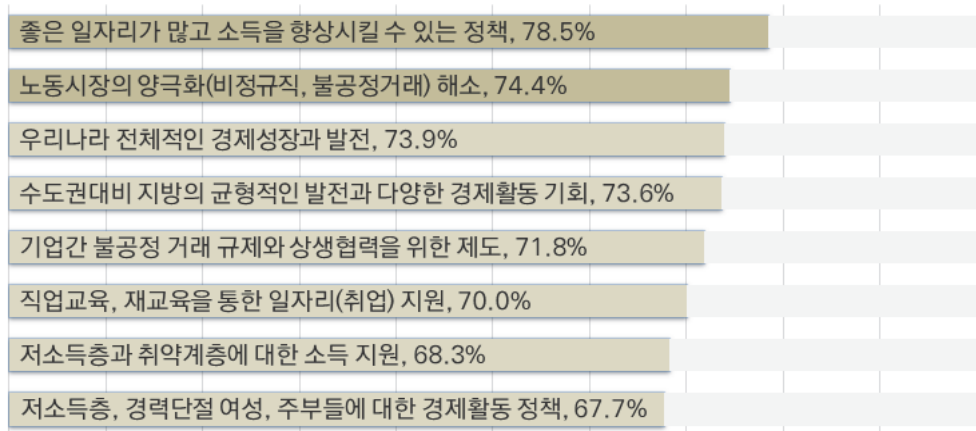


- (경제·사회 분야별 중요성)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성 측면에 있어 **경제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사회분야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정책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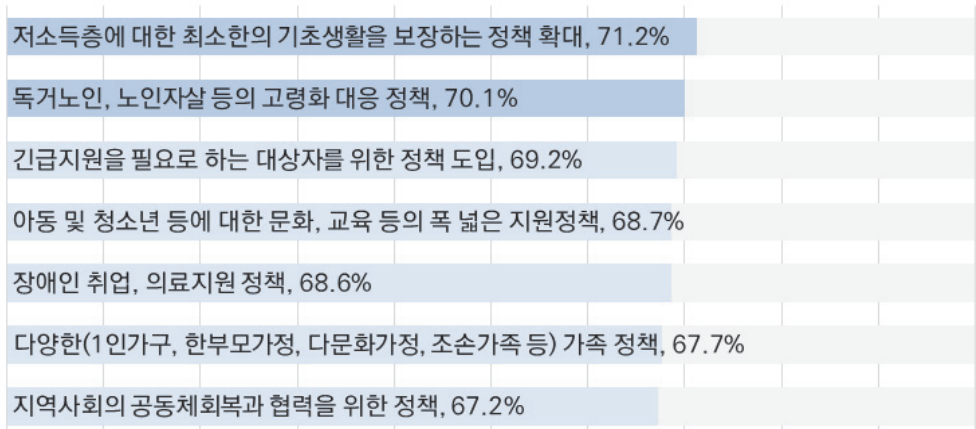
- 본 과제의 방향과 사업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

[정책분야별 중요성]

경제분야



사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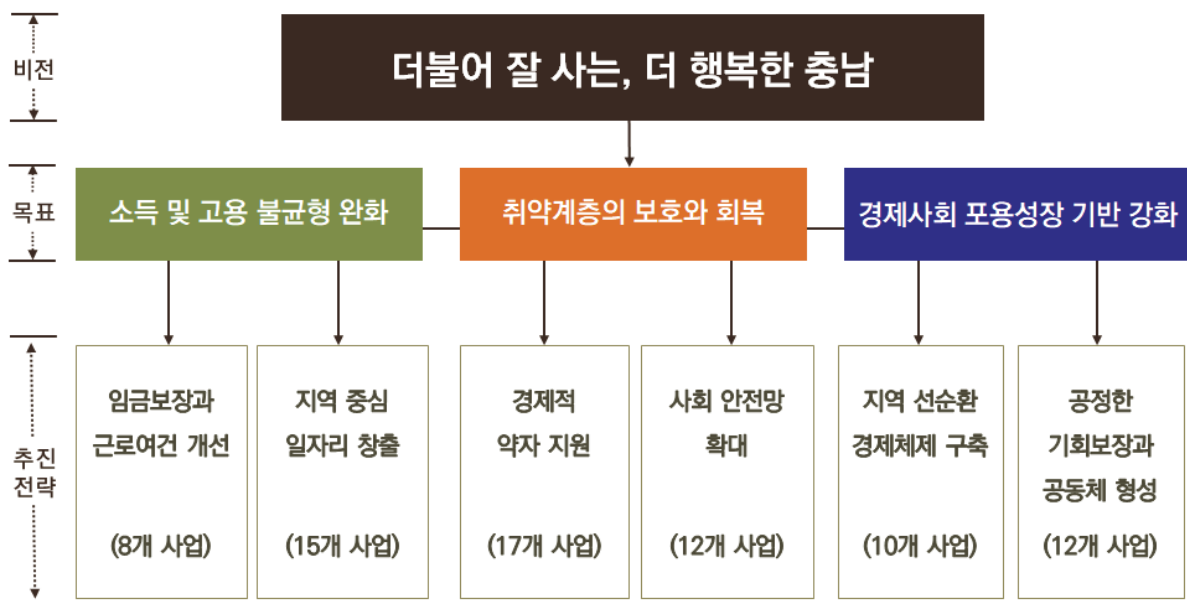


6. 양극화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① 충남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의 검토와 설정

- (동태적, 중장기적 측면의 접근) 정태적 측면이 아닌 동태적 측면에서 양극화 부작용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
 - 단기적이거나 과도기적인 경제정책은 고용불안 계층을 증가시키고 분배 구조를 악화시킴으로서 결국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심각히 침식
- (선도부문과 낙후부문간의 동반성장)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선도부문에 대한 정책 병행을 통해 상호 연관성 확대 및 보완
 -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 등의 선도부문에 대한 지원과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확대 파급될 수 있는 정책방향 고려
-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와 관리체계 구축) 지역내 경제주체의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분야의 고용·노동정책과 복지 및 전달체계 등의 핵심 타깃 설정
 - 양극화는 경제·사회 전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도정기조하에서 총괄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비전 및 목표별 추진전략]



②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실행과제(List)

목 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74개 과제)	사업구분	
			신규 22 계속 52	단기 11 중기 9 장기 54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1. 충남형 지역사회 협약 2.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 3. 최저임금미달 사업장 실태조사 및 특성화 방안 마련 4.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 5. 노동법원 신설 6.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8.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지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계속 신규 신규	단기 중기 단기 중기(제안) 중기(제안) 장기(반복) 장기(반복) 단기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9.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10.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11. 청년 지역 인재 순환시스템 구축 12. 청년 창작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13. 신중년 성공프로젝트 14. 일자리 진흥원 운영 활성화 15.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16.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17.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 노인 일자리 장려금 지원 20.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2. 충남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작업장 설치 23.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신규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신규 계속 신규 계속	장기 중기 장기(반복) 단기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 장기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경제적 약자 지원	24.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25.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6.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27.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8. 취업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29.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30.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31.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32.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33.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 3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35.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36.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규 신규 계속 계속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중기 장기(반복) 단기 장기(반복) 중기(제안)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37.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8.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39. 경로당 태양광 설치 4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사회 안전망 확대	41.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 개발 42.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43. 의용소방대 현장 밀착형 자살예방 활동 44.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4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6.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7.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48.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119구급 서비스 49.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LED) 50.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5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5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장기 단기 중기 장기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반복) 단기 장기(반복) 장기(반복)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지역 선순환 경제 체제 구축	53. 충남형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지원 54.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55. 지역기업 현지화 56. 지역화폐 활성화 57. ICT 기반 지역 협력적 소비플래너 양성 58. 마을기업 육성 59. 상생형 어촌계 연금제 도입 60. 청년 어촌정착 지원 61. 성과공유제 도입 62.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신규 계속	중기 장기 장기 장기(반복) 중기 장기 장기(반복) 중기 장기 장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성장기반 구축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63.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 신설 64. 학교 밖 청소년 성장수당 지원 65.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 66. 충청남도 진로융합교육원(가칭) 설립지원 67.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및 교육권 확보 68.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69. 사회문제해결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7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7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2.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73.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74.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지역 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신규 신규 계속 신규 계속 계속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신규	단기 장기 중기 단기 장기(반복) 장기(반복) 장기 장기 장기(반복) 단기 장기(반복) 단기

7. 정책 목표별 주요 추진 사업

1. 소득 및 고용불균형 완화(경제주체의 소득창출과 일자리 기반 강화)

충남형 '지역사회협약' 제도 도입 <핵심과제>

- 근로 취약계층 고용 및 공정임금 보장을 위한 “도·시·군-사용자-노동자”의 지역사회공동 협약 모델 (공정임금 부족분 및 인센티브에 대한 지자체 지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 <핵심과제>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기준 확보, 단계별 표준임금체계 마련
 - *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표준임금체계 구축 및 임금공시제 실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핵심과제>

- 지역대학(연고) 출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및 전 기관 시행
 - * 도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목표 추진, 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핵심과제>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의 동인 확보
 - * 우리지역 출신으로 지역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년 이상 경영활동을 영위한 청년 대상(19세~34세), 기초자산으로 1,000만원의 지역사회상속제도 운영
- 청년수당, 청년 기초자산 등 시도별 청년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추진

- 지역내 소규모 농어업 경영체가 많아 농어업으로는 소득 확대가 거의 불가능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급(도내 16만 5천가구)
 - * 지역내 전체 농가의 64.6%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ha 미만)의 농업소득은 지속감소 추세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역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를 바탕으로 한 고용기반의 복지 실현
 - * 지역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1%로 의무고용비율(3.1%)에도 미치지 못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활 공동작업장 설치

- 지역내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도모와 생산 및 판매, 교육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지역자원 활용, 리모델링 등)
 - * 지역단위의 안정적인 사업장 확보로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 마련

2.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의 공생발전)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추진 <핵심과제>

- 저금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채무조정확정자)에 대한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을 방지하고 **저금리 대출전환과 함께 경제적 회생 지원**
 - * 연 3~4%(학자금 2%, 취약계층 2.1~2.8%)이내의 저금리 소액금융 지원 확대
 - * 충남도 채무조정확정자 47,580명, 이중 금융에 접근 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 18,615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과제>

-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편입
 - * 기준 보수액의 50% 지원을 통해 실업급여(90~180일)지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등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 개발 <핵심과제>

-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한 독거노인의 고독사예방과 노년의 삶의 질 확보
- 운영중인 독거노인 **공동 생활홈 내실화** 및 **읍면동 단위 거점형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추진
 - * 농촌지역 우선 시범사업으로 읍면동 단위 중형 공동생활 홈을 의료(보건소 등), 교통, 생활편익(농협 등) 중심지역을 고려하여 추진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핵심과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우울 및 자살위험 등에 대한 **게이트키퍼 의무교육 및 확대** (노인 대상 자살 및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심리검사제도 도입, 연 10만명 이상)
- 자살위험군 및 고위험군, 자살시도 실패 노인에 대한 **통합DB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제안)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체납 독촉 제한 및 체납 처분 유예신청·분납허가**
 - * 공공일자리 우선 채용 및 일자리 지원, 저신용·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확대

취업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 재가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자활을 통한 자립준비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장애인 대상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 * 장애인이 취업 후, 월급의 일정금액을 매월 적금할 경우 도 지원금과 매칭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3.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성장기반 구축)

충남형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CSV)사업 <핵심과제>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역에 맞는 충남형 모델 발굴과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전환
 - * 단순 사회공헌이 아닌 기업 이미지와 주요사업 분야를 지역에 접목하여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사회가치를 공동으로 공유 (포스코-스틸빌리지, 삼성-드림클래스(도서벽지 교육))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핵심과제>

- 200억원 규모의 **기금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융자 및 비금융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는 혁신 거점, 지역맞춤 허브&스포크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가칭) 신설 <핵심과제>

-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포용성장에 대한 다각적 정책발굴과 기획**을 위한 공론의 장
 - * 고용·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과 경제주체의 갈등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청년수당, 농어민수당, 기본소득 등 산별적 정책에 대한 통합 논의·조정)
 - * 양극화 및 포용성장관련 조례 제정 전까지 특별위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수당 지원 <핵심과제>

- 학교 교육 등의 제도권 밖의 학생들에게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 **개별 학업과 진로 활동 설계를 위한 성장지원** 수당 지급
 - * 학업중단은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희망하는 학습 수강과 진로 탐색과정으로 인식 필요

사회문제해결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전문화되고 다양한 재능분야 광역단위 인재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 * 재능나눔 봉사단 구성(광역단위 인력 Pool 구성)운영 및 사회적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 확산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지역 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 충남 북부권 및 농어촌 등의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지역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 * 집중거주지역 선주민과 이주민의 연계, 아동 돌봄 및 교육, 건강 등 이주민 인권 증진 사업 등
- 천안, 아산, 논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단계적 확대

